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 - 4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9월에 발표한 「신용평가지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8.1.1일 공포 예정)에 맞추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제4-63조, 제8-19조의14 신설)

-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

* 선정방법 : 차등배정(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수준, 신평사 역량평가 결과를 고려한 배정)과 순환배정을 혼합하여 적용 (→ 시행세칙에 반영)

②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제도 도입 (제8-19조의13 신설)

-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아래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 1)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 불가
- 2)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 3) 신용평가대상의 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③ 신평사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강화 (제8-19조의10)

- ❶ 신평가 조직과 영업 조직의 분리 의무화
 - ❷ 신평가 과정에서 신평가 요청인 등에게 자사·계열사의 상품·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❸ 신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 확대
 - (현행)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 (개정)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i)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ii)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 이해상충 방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기관경고·주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 가능

④ 신평사의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제8-19조의11)

- 신평사는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금융위·거래소·협회에 제출·공시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